

도의회 의정 중계석

녹색생활 채식문화 조성

이명연 도의원 발의 조례안, 의회 상임위 통과
채식의 날 지정 운영·식단 지원 등 명시돼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해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문화 조성을 위해 전북도의회가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전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채식문화 활성화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채식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공공기관 등의 채식의 날 지정 운영, ▲채식모범 음식점 인증, △어린이 및 학생 대상 채식 식단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지속 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 뿐만 아니라 비산업부문 및 일상생활 속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 실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녹색생활 실천 방안으로 채식환경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죽산읍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됐고 각 연구보고를 바탕으로 많은 국가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연 위원장은 “최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염두에 둔 음식을 준비하고 접대하는 행동인 ‘기후미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채식은 일상생활 속 기후변화 대응 실천의 중 하나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국가정책에 반영되길 맹호히 전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이 구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군산항 해상전자상거래 특송장치장 조속 설치돼야”

나기학 도의원, 촉구 건의안 발의… 물동량 증가 기대



군산항 물동량 증가를 위해 군산항에 해상전자상거래 특송장치장을 통관할 수 있는 ‘특송장치장’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나기학 의원(환경복지위·군산1)은 8일 제382회 본회의에서 ‘군산항 전자상거래 특송장치장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나기학 의원은 지난 현대중공업 군산선조소 가동 중단 이후 군산항은 지속되는 악재로 인해 경기 침체의늪에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최근 군산항의 물동량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기학 의원은 “최근 군산항 자동차 수출전진기지의 핵심축 중 하나인 기아자동차 군산사무소가 철수했고 주력

화물 중 하나인 사료의 물동량 또한 감소하고 있으며, 군산지역에서 가동 중인 3곳의 열병합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우드펠릿 마저 대부분이 군산항이 아닌 광양항을 통해 입고 되고 있어 하역시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군산형 일자리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어 군산지역 산업의 핵심 축인 군산항의 상황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전북도는 군산항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중국과의 국제전자상거래 물동량 증가 상황에 중국 산동성 지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군산항이 자리적으로 강점이 있다고 판단하며, 군산항 전자상거래 특송장치장 건립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유호상 기자

군산항 전자상거래 특송장치장이 설치되면, 현재 인천항까지 보세운송되는 특송화물의 물류비를 줄임과 동시에 화물의 배송 기간까지 단축할 수 있어 수도권 이남지역 해외 직구 소비자들의 권리 보장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 역시 특송화물에 대한 빠른 통관이 이뤄진다면, 중국 간 특송화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고용창출 및 다양한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북도와 군산시가 특송장치장 설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세청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특송장치장 건립을 위한 가속도가 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나 의원은 “군산항 활성화와 수도권 이남지역 소비자의 권리 보장 및 국가적인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중국 간 특송화물 운송 최적지인 군산항에 조속히 특송장치장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21년 전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사례에 ‘부자금융자제도’, 진안군(시·군)이 각각 선정됐다.

도는 도민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8일 ‘2021년 전라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도 부문에는 투자금융과가 최우수상을, 동물방역과, 방호예방과가 우수상을 수상했고, 시·군 부문에서는 진안군이 최우수상을, 군산시, 남원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투자금융과의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사례는 특례지역 지정, 법규개정, 관련 부처 협업 등 과격적 제도개선으로 대기업을 유치, 도내 3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시·군 부문 최우수상인 진안군의 ‘온라인 윈스톱 민원처리체계 구축’은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생활정보 제공부터 민원처리까지 원격 지원하는 ‘주민생활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처리 및 행정 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전문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호상 기자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읍·면·동장과 머리 맞댄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유 워크숍 오늘 개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김장희)은 지자체의 역할 인식 제고를 통해 국정현안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오늘 오후 2시부터 ‘읍·면·동·광역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인재개발원은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서울 등 17개 시·도 읍·면·동장 290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접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한국판 뉴딜 등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최일선 현장의 주체인 읍·면·동장과 국정현안을 공유함으로써 당면 현안이 전국에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홍정의 과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을 설명하고 미접종자 접종 독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확인방법 안내 등을 읍면동장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하경환 과장은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 윤태범 단장은 한국판뉴딜 출발점 지역에서 시작된다’는 제목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읍면동장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또 상법과 가해자 군인의 불급 및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을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은 주요 국정과제의 내용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방자치 일선현장에서 읍면동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장희 원장은 “읍·면·동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행정의 최일선 현장으로 읍·면·동의 역할 수행에 국정현안의 원활한 추진 여부가 달려 있다”며 “이번 워크숍이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신 읍·면·동장님들의 정책 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민주, “군사법원법 개정 6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8일 민원질 국방위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법원 청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위 내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 지휘관과 사법관 분리 등 군사법원법 개정 6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국방위 및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군 성범죄 관련 법안 처리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 가해자 군인의 불급 및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을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뉴시스



도의회 정례회 개회

8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2회 도의회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도의원들이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민주,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 의원 명단 공개

부동산 명의신탁 - 김주영 · 김회재 · 문진석 · 윤미향

농지법 위반 - 양이원영 · 오영훈 · 윤재갑 · 김수홍 · 우상호

업무상 비밀이용 - 김한정 · 서영석 · 임종성 의원 등 총 12명

“의혹 해소해달라” 지역구 의원 탈당 · 비례대표는 출당 조치

공개된 명단에는 총 12명의 의원이 포함됐다. 이를 중 6명은 본인이 투기 성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고, 5명은 배우자, 1명은 직계 가족이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경우였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의원은 김주영(초선·경기 김포갑), 김회재(초선·전남 여수을), 문진석(초선·충남 천안갑), 윤미향(초선·비례) 의원 등 4명이었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를 받은 의원은 3명으로 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서영석(초선·경기 부천정), 임종성(재선·경기 광주을) 의원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를 받고 있는 의원은 양이원영(초선·비례), 오영훈(재선·제주 제주시), 윤재갑(초선·전북 해남군·전진도), 김수홍(초선·전북 익산갑), 우상호(4선·서울 서대문갑) 의원 등 5명이다.

해 있는 전북의 역할이 큰 만큼 우선 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선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확고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국가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는데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면서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 외국의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뇌물 권리형 비리를 만들어 내는 부분은 엄격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끌고 전북 공약에 대한 질문에 박용진 의원은 “지역 공약에 앞서 대안민주당 분권이 시급하다며, 청와대 권력이 국회와 행정부 등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과 준연방제 수준으로 지역의 권한과 책임이 커져야 한다”고 밝히며 “전북의 당면 과제 해결에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통합 운용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위치



“국민자산 5억원 성공시대, 구체적 플랜 있다”

‘대권 도전’ 민주 박용진 의원, 전북 찾아 공약 피력

“국민연금 기금분부 · 투자공사 통합 ‘테마섹’ 설립”

해 있는 전북의 역할이 큰 만큼 우선 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선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확고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국가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는데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면서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 외국의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뇌물 권리형 비리를 만들어 내는 부분은 엄격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끌고 전북 공약에 대한 질문에 박용진 의원은 “지역 공약에 앞서 대안민주당 분권이 시급하다며, 청와대 권력이 국회와 행정부 등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과 준연방제 수준으로 지역의 권한과 책임이 커져야 한다”고 밝히며 “전북의 당면 과제 해결에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통합 운용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위치

하는 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수제맥주 제조사들의 숨통을 트워주는 한편, 가격 인상 억제를 통해 생맥주 소비자들에게도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김수홍 의원은 “이번 주세법 개정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돌보는 입법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생맥주 경감세율 2023년 말까지 연장

김수홍 의원, 주세법 개정안 발의

김수홍 국회의원(의산갑, 기획재정위)이 지난 7일 생맥주에 대한 경감세율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주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2020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됐는데, 이 과정에서 캔맥주·병맥주의 달리 생맥주 판매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수홍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맥주 판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경감세율 적용을 2년 연장

하는 개정안을 낸 것이다.